

01

서장

동아시아 전통질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_국제정치학과 역사학의 만남

■ 전재성

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2008)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자주외교 연구」(2008)

「라인홀드 니이버의 기독교적 현실주의 국제정치 사상」(2005)

Contents

- 1 동아시아 전통질서 연구의 현재적 의의
- 2 동아시아 전통질서 연구의 문제들과 연구 방향
- 3 이번 호의 구성

변화하는 21세기 국제정치 속에서 한국은 앞으로 다가올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환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국민국가 중심의 근대국제질서가 변화되는 한편, 중국의 부상으로 전통 중화질서에 대한 담론이 다양한 형태로 분출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왕조들이 전통질서 속에서 어떠한 대외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분과로서 국제정치학과 역사학이 가장 핵심적인 분과지만, 국제정치학자들은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근대 이행 이후의 국제관계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분석적 도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역사학계에서는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연구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관계가 21세기에 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보다 활발한 연구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를 연구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 학계의 다양한 분과들이 협력적 관점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의 논제들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이 생산해 낸 전통지역질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학문적 토론과 협력을 해나가고,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가질 수 있는 지구적 함의를 도출해 낸 후, 다른 지역, 그리고 지구 전체의 정치적 질서연구에 생산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미래 향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사대자소, 화이질서, 중국의 부상, 조명관계, 조청관계

1. 동아시아 전통질서 연구의 현재적 의의

(1)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전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조망
21세기의 첫 10년을 지낸 현재의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격변의 와중에 있다. 동아시아를 둘러싼 지구적 정치질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진행 중이고, 그 속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의 질서를 분석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9·11테러를 거치면서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 자들에 의해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미국은 일방주의적 군사주의로 소위 21세기적 ‘제국’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국제질서에 대한 논의는 제국론을 위시하여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다른 강대국의 견제와 반발, 국제기구의 소극적 지지, 지구적 시민사회의 도덕적 비판 등에 직면하여 결국 정당성이 약화되어 지속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질서는 보다 다극적이

고 분화된 질서로 귀착되는 듯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강대국들이 독점하는 문제해결 방식은 점차 실현이 불가능해지고, G20의 사례에서 보이듯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여 지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버넌스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역질서는 과거 서구의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의 경로를 찾는 모색을 활발히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동국가들은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만, 서구 제국주의 이전에 보존해 왔던 자신들의 독특한 문명과 규범, 대외관계에 대한 시각을 강화하여 때로는 무력을 사용하고, 때로는 외교를 사용하여 자신의 권역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이슬람의 세계관을 강화하여 외부세계의 간섭과 개입에 저항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사건들로, 테러야말로 이러한 독자적 목소리의 가장 폭력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구 합리주의에 대한 철학적, 문명론적 비판을 깔고 있으며, 과거 이슬람교에 기반한 세계관을 주장하고 있다. ‘진근대성’ 혹은 ‘전통’의 세계관의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탈세속화’라고 할 수도 있으며, 서구 합리주의에 대한 근본주의적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과거 중동의 강대국들은 새로운 국제무대에서 지역패권의 지위를 찾고자 다양한 수단을 탐색하고 있다.

정치질서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이 활발해지는 것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 한편 역설적인 현상이다. 세계화가 강화되면서 보편적 정치질서를 향한 수렴 현상이 일어나면서도, 오히려 각 지역질서의 독특한 세계관이 더욱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등과 같이 많은 국가들이 수렴하는 질서가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 지역별로

이러한 질서는 독특한 모습으로 정착되거나 또는 저항에 직면하게 때문이다.

(2) 중국의 부상과 중화주의에 대한 새로운 조명

세계화의 과정과 더불어 나타나는 다른 현상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다. 소위 BRICs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 등 새로운 강국들이 부상하여 기존의 강대국에 도전하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G2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는 지구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다양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지만, 부상의 시대적 배경에는 새로운 요소들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중국의 부상은 정보화, 민주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구적, 지역적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와중에 많은 국가들과,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중국의 부상을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환영과 우려 등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이 평화적이며, 지역질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소위 '소프트 파워'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외교 정책과 방위정책의 평화지향성과, 중국 경제가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경제 질서에 득이 된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지난 2000여 년간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지역패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 평화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 중국의 문화와 지도력이 주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의 대외관계는 곧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였고, 안과 밖의 구별이 없는 중국의 전통천하질서가 동아시아 전체를 관장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중국의 문명론적 관점, 중화사상은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외교를 뒷받침하며, 중국의 지역적 책임감을 높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앞서 과연 동아시아의 전통질서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학문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지역질서 전체는 물론, 상호 충돌적 사건들을 둘러싼 역사인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민족주의적 충돌로 이어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과거 동아시아 정치체들이 함께 살아왔던 지역의 정치질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3) 미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규범적 기반의 필요성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은 비단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상황 변화에만 기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의 세력 전이 현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러한 세력 전이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다루어 갈지는 동아시아 전통질서에 대한 문화적, 학문적 분석에 부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50여 년 동안 동아시아가 유럽 근대국제질서의 압도적 영향하에 놓여 독자적 거시 이행을 할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를 위해 어떠한 지역전략적 공동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전히 국가중심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다자적 합의체의 결여, 세력 균형과 같은 요소로 특징지어진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 이행기에 제국과 식민의 양분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완전한 국민국가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에는 중국과 한국, 두 개의 분단국가가 존재하며, 일본은 태평양전쟁 이후 여전히 헌법적 제약에 놓여 있다. 전통질서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다자적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기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서로 간의 세력 균형, 혹은 미국과 같은 역외국가의 안정자 역할에 기대어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유럽의 경우 지역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군사적, 경제적 협력에 기반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존되어 온 역사적 집합정체성을 활용하고 있다. 상호 협력적 경험과 전통을 제도적 규범과 담론 등에 활용하여 보다 유연하게 지역다자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동아시아는 전통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요인들과 단절되어 현재의 세력 균형을 극복할 방안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한국의 미래 대외전략과 전통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정책

체제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연구하는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별도로 한국의 대외정책의 차원에서도 전통질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흔히 근대로 이행되기 이전의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정책은 사대주의적 정책이었다고 쉽사리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 왕조들이 중화주의에 물들어 중국과의 정치적 일체성을 가지고 중국의 지역질서에 순응하여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대주의는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정책에서 전략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는 막연한 가정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주변의 강대국을 상대하는 것은 전통질서에서나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에서나 절체절명의 이슈다. 한반도 왕조들이 중국의 왕조들이나 요동지역의 세력들, 일본 등에 대처하는 방안은 단순히 사대주의적 대외정책이라고 치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내적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대외적 자주성을 견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초 한국은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은 발전에 기초하여 지구적 중견국, 그리고 동아시아 중견국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세우고자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다자적 협력구도를 만들어 가는 데 협력촉진자의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지구적 중견국으로서 새로운 대외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중국, 러시아 등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과도 성숙한 협력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외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왕조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왔던 강대국 외교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더구나 현재의 국제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고, 많은 강대국들이 자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위한 규범적 자원을 찾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국 나름의 대외정책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5)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 연구의 의의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비추어, 현재 한국 학계에서 전통지역질서를 연구하는 현황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분과로서 국제정치학과 역사학이 가장 핵심적인 분과지만, 국제정치학자들은 과거와 단절된 상태에서 근대 이행 이후의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분석적 도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역사학계에서는 대외관계를 연구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연구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관계가 21세기에 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보다 활발한 연구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를 연구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한국 학계의 다양한 분과들이 협력적 관점에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의 논제들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국이 생산해 낸 전통지역질서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학문적 토론투과 협력을 해 나가고,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가질 수 있는 지구적 함의를 도출해 낸 후, 다른 지역 그리고 지구 전체의 정치적 질서 연구에 생산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현재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정치질서의 미래 향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아시아 전통질서 연구의 논제들과 연구 방향

(1) 전통질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필요성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어려운 일이다. 시간적으로는 아시아가 19세기 중반 유럽 근대국가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을 대상으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소위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가 미치는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시공간적으로 명확

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범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정치단위들 간에 빈번한 상호교류가 있는 범위까지를 국제체제라고 일컫고, 이들 정치단위들이 사회적 규범과 상호 이해를 공유할 때 국제사회라고 일컫기도 한다.¹⁾ 동아시아 전통질서 속에서는 때로는 상호 간의 규범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과 폭력을 매개로 서로 다른 정치집단이 관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통된 이념과 규범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계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소위 '질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변적인 와중에서도 일정한 교류의 형태를 지녀야 하는데 동아시아의 정치지리적 성격상, 중국의 중원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민족집단이 상호교류를 하는 상황이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를 이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으로 동아시아가 의미 있는 정치단위가 된 시점을 알기는 쉽지 않지만, 대략 중국 최초로 통일왕조가 이루어졌던 진나라를 기점으로 중원의 왕조가 외부적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도, 짧은 진왕조 이후, 한왕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북부에서 양측의 교류가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 중원 이외의 지역과 교류하는 통일왕조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의 상황은 매우 가변적이다. 우선 중원에 통일왕조가 존재하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가 나뉜다. 그리고 통일왕조가 존재하더라도 중국 한족의 왕조가 지배하던 시기와, 이민족이 중원을 장악하여 이민족의

1)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참조.

[표 1-1]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유형

| | 국제사회적 특성 | | 국제체제적 특성 | |
|----------|----------|---------------------|----------|-------------------------------|
| 중원의 통일왕조 | 유형 1 | 한족 왕조(서한, 당, 북송, 명) | 유형 2 | 한족 왕조(동한, 수, 당 말기) |
| | | 호한(胡漢) 혼합왕조(청) | | 호한(胡漢) 혼합왕조(원) |
| 중원의 분열 | 유형 3 | (춘추, 전국시대) | 유형 4 | (남송, 요, 후금, 위진남북조, 5대 10국 시대) |

통일왕조를 설립한 시기도 구분될 수 있다. 각 경우에 상대적이기는 하나 동아시아 질서가 보다 국제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공존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각 정치집단들이 무력을 통해 갈등적으로 존재한 시기도 있으며 이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1] 과 같다.²⁾

다음으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각 유형이 차지하는 기간과 특성을 살펴 보면 주나라의 성립을 BC 2132년으로 볼 때, 중원이 전체적 혹은 상당 부분에 걸쳐 이민족의 지배하에 놓여 있던 기간은 북조, 북송/남송, 원, 청에 걸쳐 도합 871년 정도다. 중국 역사를 총 2956년이라 상정한다면, 29.5%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진나라 성립인 BC 221년부터 계산하면, 진나라에서 청까지 총 2132년 중 총 40.8%의 기간이 이민족 통치하에 놓여 있던 기간이다.

반면 중국 한족이 통일하여 중원을 다스렸던 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1479년으로, 주에서 청까지의 기간 중 50%, 진에서 청까지의 기간 중 69.4%의 기간이 중국 한족에 의해 다스려진 셈이다.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2) 전제성, “전통시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손연 필,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컨센서스』(서울: 지식마당, 2007) 참조.

[표 1-2] 중원 왕조의 변천

| | | |
|----------------|-----------------|--------|
| 서주(한족통일) | BC 1045~771 | 274년 |
| 춘추시대(한족분열) | BC 770~453 | 317년 |
| 전국시대(한족분열) | BC 453~221 | 232년 |
| 진(한족통일) | BC 221~206 | 15년 |
| 서한(한족통일) | BC 202~AD 9 | 211년 |
| 신(한족통일) | 9~23 | 14년 |
| 동한(한족통일) | 25~220 | 195년 |
| 삼국시대/위진남북조(분열) | 220~581 | 361년 |
| 수(한족통일) | 581~618 | 37년 |
| 당(한족통일) | 618~907 | 289년 |
| 5대 10국(분열) | 907~960 | 53년 |
| 북송(한족통일) | 960~1126 | 166년 |
| 남송, 요, 후금(분열) | 1127~1279 | 152년 |
| 요(분열) | 960~1125 | (165년) |
| 후금(분열) | 1125(1115)~1234 | (109년) |
| 원(이민족 통일) | 1279~1368 | 89년 |
| 명(한족통일) | 1368~1644 | 276년 |
| 청(이민족 통일) | 1644~1911 | 267년 |

[표 1-3] 중원 왕조의 통일과 분열

| | | | |
|-----|--------|-------|-----|
| 통일기 | 한족 통일 | 1479년 | 50% |
| | 이민족 통일 | 358년 | 12% |
| 분열기 | 1119년 | | 38% |

국제체제 혹은 국제사회의 특징과, 이들 체제들의 이행의 논리, 그리고 이행을 일으키게 된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왕조의 교체 및 중원을 차지한 왕조의 기원 및 성격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보다 세분된 시대 구분도 필요한 일이다.

유럽 국제정치학, 역사사회학, 그리고 역사학의 경우 유럽의 지역질서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이념적 요인을 규명하여 변화의 흐름을 보다 이론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축적되

어 있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유럽 근대 국제질서의 출현과, 더 나아가 21세기 일어나고 있는 탈근대 지역질서의 출현과 발전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들과 가설들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질서가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원인을 이루는 각 층위에 대한 분석과, 이를 이론화할 수 있는 개념들과 가설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반드시 사회과학적인 이론을 배경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전통지역질서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 주는 함의를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통질서의 이론적 이해

전통시대의 동아시아를 하나의 연구단위로 놓고, 각 정치 주체들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간 내부의 진화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사회과학자들은 전통 공간 속에서의 지역질서를 연구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개념들을 적용하는 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학자들은 근대 유럽의 국제질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온 개념들과 이론적 가설들을 동아시아 전통질서에 적용해 봄으로써 더 많은 함의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용희의 연구가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³⁾ 이용희에 따르면, 전통지역질서에서 정치적 공간은 천하로 개념화되었고, 단일적 천하 속에서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위계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본다.

3) 이용희·신일철, “사대주의: 그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용희(편), 『한국민족주의』(서울: 서문당, 1977) 참조.

사대의 예가 통용되는 공간 개념은 주나라로부터 시작되어 외부로 확산된 것인데, 주는 은나라를 이긴 후에 희(姬)씨 성을 가진 친족 제후, 아니면 주나라 종묘에 참배해야 하는 공신제후들로 이루어진 영역의 나라였다. 천명에 의한 천자의 통치로서의 정치는 사대의 예를 매개로 한 것이었고, 전국시대 이러한 예가 몰락하자, 유가들은 상하의 서계(序階)를 다시 부활하고자 한 것이라고 본다.

사대의 예는 중국과 주변 왕조들 간의 정치적 유대로서, 중앙과 주변의 정치적 정당성을 서로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정권은 주변의 많은 왕조로부터 사대의 예를 받아 정권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반면 주변의 소국은 중국의 책봉을 받아 정권의 정당성뿐 아니라 신분사회의 왕조 유형이라는 정권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국제주의는 비단 유교문명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중세 유럽, 동로마 정치권, 이슬람 정치권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 비교적 관점을 성립시킨다. 국제질서의 상하관, 국가 개념의 이중성, 부자(父子)로 권내(圈內)는 호칭하고 강대한 만이(蠻夷)에 대해서는 형제로 부르는 예(禮), 조공의 제도와 책봉의 의식 등이 공통되어 있어 보다 개념적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연구 사례로 최근 이삼성이 기존 역사학계에서 전통 동아시아 질서를 보는 관점을 살펴본 후, 나름대로의 개념들을 만들고자 시도한 바 있다. 기존의 시각들의 경우,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과 김한규의 ‘역사공동체론’ 및 ‘요동국가론’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로 역사학적 연구에 기반한 것이다. 이삼성은 이를 좀 더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조공, 책봉체제 속의 한중관계를 ‘위계적 안보레짐’으로 개념화하

고, 요동지방의 제3세력이 체제적 수준에서 중요하게 작동할 때, 한중관계가 변화되어 온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⁴⁾

동아시아 전통질서에 대한 연구는 21세기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학과 중국을 연구하는 구미학계에서 빠르게 축적되어 가고 있다. 왕궁우는 중국의 부상을 전통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중원 왕조의 부상과 연결하여 역사상 네 번째의 부상으로 간주한다. 진한시대, 수당시대, 명청시대를 거쳐 이제 네 번째 중국이 부상하는 환경에 처했다는 논리다. 그 연속성 테제의 근거를 떠나서라도 현재 중국의 부상을 전통 동아시아 질서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시각의 새로운 전환이라 할 수 있다.⁵⁾ 빅토리아 휘와 장용진의 연구 역시 최근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나 국제사회학파의 논의로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지역질서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⁶⁾ 사용한 이론적 틀은 현재의 국제정치학적 틀이지만, 과거 중국의 지역질서를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중국의 전통질서를 재조명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열철 논쟁을 중국의 전통적 대외전략 관점에서 소개한 주종보와 왕닝의 연구나,⁷⁾ 순자의 관점을 현재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론

4)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전통시대 동아시아 2천년과 한반도』(서울: 한길사, 2009)과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근대 동아시아와 말기조선의 시대구분과 역사인식』(서울: 한길사, 2009) 참조.

5) Gungwu Wang, "The Fourth Rise of China: Cultural Implications",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2-2(Sep. 2004), pp.311~322 참조.

6) Hui, Victoria Tin-Bor, *War and State Formation in Ancient China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Hui, Victoria Tin-Bor, "Toward a Dynamic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sights from Comparing the Ancient Chinese and Early Modern European Syste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1(Winter 2004), pp.175~205; Yong Jin Zhang, "System, Empire and State in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27-5(2001), pp.43~63 등 참조.

화를 시도한 옌 쉐통의 연구,⁸⁾ 묵자의 관점을 대외전략 관점에서 분석한 리빈의 논문⁹⁾도 세계 국제정치학계에 중국의 관점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펑은 전통시대의 조공질서를 좀 더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존에 존재했던 페어뱅크류의 관점, 중국 중심의 관료주의적 시각, 그리고 국제사회학파의 해석을 소개하고 이를 종합하려는 연구도 시도하고 있다.¹⁰⁾ 그밖에도 청나라 말기, 19세기의 근대 이행기를 분석한 논문들과,¹¹⁾ 이러한 중국적 관점을 국제정치학적 차원에서 분석한 메타이론적 논문 등을 들 수 있다.¹²⁾

현재 중국의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구미 학자들이 시간적 차원을 넓혀 전통시대 동아시아 질서나 중국의 대외전략을 연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중국의 전략 문화를 유가적 평화주의와 현실주의 간의 관계로 파악한 존스

7) Zhu Zhongbo and Wang Ning, "Discourses on Salt and Iron and China's Ancient Strategic Cultur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08.2), pp.263~286 참조.

8) Yan Xuetong, "Xun Zi's Thoughts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ir Implic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08.2), pp.135~165 참조.

9) Li Bin, "Insights into the Mozi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09.2), pp.421~454.

10) Zhang Feng,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Broadening the Conceptual Horizon of Historical East Asian Politics",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09.2), pp.545~574 참조. 또한 Fairbank, John, K(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Thomas J. Barfield,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Cambridge: B. Blackwell, 1989)도 참조.

11) Zhang Xiaomin and Xu Chunfeng, "The Late Qing Dynasty Diplomatic Transformation: Analysis from an Ideational Perspectiv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07.1), pp.405~445; Zhou Fangyin, "The Role of Ideational and Material Factors in the Qing Dynasty Diplomatic Transformation",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2007.1), pp.447~474.

12) Qin Yaoqing: Why there is no Chines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7, No.3(2007), pp.313~340; Zhao, Suisheng, *Power Competition in East Asia: from the old Chinese world order to post-cold war regional multipolarity*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7) 등 참조.

톤의 연구,¹³⁾ 서구의 공격 중심의 전략 문화와 비교하여 방어 중심의 전략 문화로 중국의 대외전략을 파악한 스코벨의 연구¹⁴⁾를 들 수 있다. 데이비드 강 경우,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의 성격의 관점에서 현재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각 세력 간의 격차를 가져오고 이러한 불균형이 균형정책을 불가능하게 하여 상대적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⁵⁾

동아시아 전통지역질서를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다른 지역과의 비교적 관점을 성립시키거나, 동아시아의 현재에 스며 있는 전통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또한 국제정치학의 연구성과를 동아시아 역사에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20세기부터 발전한 국제정치학이라는 것이 각 국가들의 외교정책과 국가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권력적 담론이 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통질서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이 현재주의적으로 채색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살았던 다양한 경험들이 선택적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를 해석할 경우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질서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⁶⁾

13) Alastair I.,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와 "Thinking about Strategic Cul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4(1995), pp. 32~64.

14) Andrew Scobell, "The Chinese Cult of Defense", *Issues & Studies*, Vol. 37, No. 5(2001), pp. 100~127.

15) David C. Kang, *China Rising: Peace, Power, and Order in 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와 "Hierarchy and Stabilit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n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3) 등 참조.

16) 정용화, "주변에서 본 조공체제",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과주: 창비, 2005) 참조.

사실 중화질서에 대한 담론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생산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례로 디 코스모는 중원 왕조와 유목민족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서주시대 이후 전한시대에 이르는 약 1000여 년간 중국은 이에 관해 기록을 남겼으나 유목공동체의 기록은 실존하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기록의 해석이 편파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기록은 유목공동체가 경제적, 문화적 자립성이 부족하여 중국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으며, 중국에 비해 문화적 저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질서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¹⁷⁾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질서 전반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더욱 늘리고, 연구 시각을 다양화하며, 이를 국제 학계에 알리는 노력을 강화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한국의 역사학계는 전통 동아시아 질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나,¹⁸⁾ 문제는 이를 국제정치학적 시각과 더불어 종합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역사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17) 니콜라 디 코스모, 『오랑캐의 탄생: 중국이 만들어낸 변방의 역사』(서울: 황금가지, 2005) 참조.

18) 많은 연구성과들이 있으나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권선홍, 『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서울: PUFs, 2004);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 공법』(서울: 나남, 1997); 김한규, 『한중관계사 I, II』(서울: 아르케, 1999); 이춘식, 『사대주의』(서울: 고려대출판부, 1997); 백영서 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5); 김한규, 『천하국가: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질서』(서울: 소나무, 2005); 전해중, 『한중관계사 연구』(서울: 일조각, 1970); 이성규, “중화제국의 팽창과 축소: 그 이념과 실제”, 『역사학보』 제186집(2005); 한명기,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서울: 푸른역사, 2009);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서울: 역사비평사, 2001); 한명기, 『광해군』(서울: 역사비평사, 2001); 전해중, “조선 전기 한중(韓中)관계의 몇 가지 특징적인 문제”,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동양학』 제14집(1984); 전해중, “청대 한 중관계의 일고찰(一考察): 조공제도를 통하여 본 청의 태도의 변천에 대하여”, 『동양학』 제1집(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71); 이병휴, 『조선 전기 사립파의 현실인식과 대응』(서울: 일조각, 1999) 등을 들 수 있다.

접근 사이의 긴장은 비단 한국 학계뿐 아니라 어느 나라의 학계에서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긴장이 있는 만큼, 대화와 종합의 성과가 더 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이해

21세기의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주변 강대국 외교는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동북아는 현재 세계 유일의 주도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과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세계적 강국인 일본과 러시아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주변국과 어떠한 외교를 펼쳐 나가는가는 미래 한국의 발전과 번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외교전략 기조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외교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동맹의 내용과 기능, 목적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발전이라는 요소가 향후 한미동맹의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한중관계 역시 한국 외교의 중요한 한 축이다.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이제는 G2시대가 논의될 만큼 강화된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중관계는 자연스럽게 지난 2000년간의 중원과 한반도 관계의 연속성을 되돌아보는 시각 속에서 언급될 것이다. 과연 지난 2000여 년간의 한중관계의 본질은 무엇이었으며, 한반도 왕조들은 중원의 왕조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요소들을 중시하였는가? 현대의 국제관계에서 중시하는 권력, 이익, 정체성 등의 요소들은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였는가? 계서적인 조직 원리의 지역질서 속에서 개별 정치단위로서의 정치적 자율성은 존재하였는가?

만약 한중관계의 역사적 기원을 BC 108년의 한사군 설치로부터 잡을

때, 대한제국이 건국하는 1897년까지의 전통 국제관계는 총 2005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기간 중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원에 통일왕조가 존재한 적도 있고, 분열된 상황이 지속된 적도 있다. 전형적인 사대자소 질서를 유지할 만큼 강력한 왕조가 존재하기도 하였고, 이민족의 중원 왕조가 들어서 지역질서의 근간이 변화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흔히 일반화 되듯이 전형적인 사대자소의 질서가 정립되어, 한중 간에 권력관계와 이익 관계, 무엇보다 이념을 근간으로 한 정치적 주종관계가 지속적으로 정립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문제는 동아시아의 특징적 질서라고 일컬어지는 중화주의, 혹은 전형적인 이념적 사대의 기간이다.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에서 말하는 권력과 이익을 매개로 한 관계는 모든 지역체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관계라고 볼 때,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도 이렇하다면 특기할 만하지는 않다. 그러나 페어뱅크와 같은 동아시아 질서관에서 보이듯이, 중원을 중심으로 한 사대 관계는 공통의 집합정체성과 계서적 질서, 그리고 잘 짜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이념적 사대관계는 한중 간에 얼마만큼 작동한 것일까? 중원의 왕조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반도의 왕조가 전략적으로 중원에 대해 편승정책을 사용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지만, 중원과의 정치적 일체성을 느끼고 이념적 집합정체성을 내재화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삼국시대와 고려왕조 기간 동안 한반도 왕조들은 중원의 한족 왕조들과 원왕조 등 이민족 왕조들을 대하면서 전략적 사대의 대중정책을 사용하여 왔다. 반면 조선왕조가 자리 잡고, 조명관계가 정착되며, 특히 태종이 취약한 국내 정권을 중국으로부터의 책봉에 의지하여 강화하는 기간이 시작되면

서 보다 밀접한 조명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략적 사대가 아닌 이념적 사대가 시작되는 정확한 기원과 사건사를 추적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대략 태종의 즉위 연간인 1400년으로부터 조선이 삼전도의 굴욕을 거치면서 청과의 새로운 사대관계를 정립하는 시기인 1637년까지가 실제로 존재했던 중원의 왕조와의 이념적 사대가 강화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이념적 사대의 기간은 총 237년으로, 이는 한중관계와 관련한 전체 한국사 2005년의 기간 중 11.8%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물론 명왕조의 멸망 이후 소중화를 칭하며 이념적 사대주의를 강화시킨 면도 있지만, 이미 사라져 버린 명왕조에 대한 사대라는 점에서 실제 존재했던 청왕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는 대외전략의 기초라기보다는 내부적 정치이념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외전략의 이념적 사대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흔히 사대주의 외교라는 외교기조가 전통시대 한반도 왕조의 대외전략 중 극히 일부만을 설명해준다고 할 때,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전략을 새롭게 설명해야 하는 일은 향후 한국 학계의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용희의 경우, 명분으로서의 사대와 힘의 관계에서의 사대를 구분하여 한국의 대외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유교적 관념의 토대 위에서 동아시아 질서를 관할하는 제도, 규범, 국제법의 역할을 하였다. 사대의 예는 주로 중국 내부 행위자들의 관계로, 만약 오랑캐가 사대의 예를 행하게 되면, 이는 중국 국제법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하고, 오랑캐는 의기양양해진다고 보았다. 반면 힘의 관계에서의 사대는 유가 이외의 묵가, 법가, 즉 묵자와 한비자 등에서 보이는 사상으로 주로 실력 관계 중심의 사대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분으로서의 사대의 예는

어디까지나 가치관이며, 국제질서 유지의 법개념인 데 대해서, 실력 관계로서의 사대는 어디까지나 강약 관계며 현실의 힘의 문제지 명분은 아니라는 것이다.¹⁹⁾

명분으로서의 사대에 집착하는 경우는, 실력으로서의 사대를 외면한 다기보다는 문명권에 남아 있고자 하는 정신적 자존심의 발로라고 보아야 한다고 이용희는 말한다. 실력으로서의 사대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문명적 태도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명분으로서의 사대는 중국중심주의, 혹은 모화사상이라기보다는 문명에 대한 자존심의 측면이 더 강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명청교체기 주전파의 입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명분으로서의 사대가 단군조선 기원설, 혹은 민족의식과 별 갈등 없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문명권 내 중앙 - 주변의 제도로서 사대자소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용희는 양성지가 태조에게 올린 건의문을 예로 들면서, 사대의 명분과 조선의 고속(古俗), 양자를 모두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별 모순 없이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⁰⁾ 사대의 명분은 문명권

19) 이용희·신일철(1972), p.151 참조.

20) “민심 수습·제도 정비·강명·예법 등에 관한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상소문”, 세조 1년(1455년), 7월 5일에 나타난 부분으로 원문 국역은 다음과 같다. “……예법(禮法)은 본국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신은 듣건대 서하(西夏)는 그 나라의 예속(禮俗)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백 년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원호(元昊)(196)는 본시 영웅이었습니다[……] 원(元)나라에서는 몽관(蒙官)·한관(漢官)이 있었는데, 원나라 사람은 그 근본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비록 중원(中原)을 잃었어도 사막(沙漠)(197) 이북의 본토는 옛과 같았습니다[……] 우리 동방 사람들은 대대로 요수(遼水) 동쪽에 살았으며, 만리지국(萬里之國)이라 불렀습니다. 삼면(三面)이 바다로 막혀 있고, 일면은 산을 등지고 있어 그 구역(區域)이 자연적으로 나뉘어 있고, 풍토(風土)와 기후(氣候)도 역시 달라서 단군(檀君) 이래 관아(官衙)와 주군(州郡)을 설치하고 독자적인 성위(聲威)와 교화(教化)를 펴 왔으며, 전조(前朝)의 태조(太祖)는 신서(信書)를 지어 국민을 가르쳤는데, 의관(衣冠)과 언어(言語)는 모두 본국의 풍속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의관과 언어가 중국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면 민심이 정착되지 않아서 마치

내 정치집단 간 관계이고, 각 집단은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힘으로 강요된 사대는 문제지만, 스스로 문명적 교섭 원리로, 사대를 인정하고 이를 지키는 의식상태 속에서, 사대의 명분은 별 문제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피터 윤은 한반도 왕조와 중국 왕조들 간의 사대자소관계, 혹은 군신책봉관계, 조공관계를 600년부터 1600년까지의 양자관계 속에서 논하고 있다. 피터 윤은 삼국시대 말기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천 년 동안 한반도 왕조와 중국 왕조 간의 양자관계를 살펴보면서, 한반도 왕조의 대중국관계가 전략적, 실용적 정책으로 일관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략적 사대관계

제(齊)나라 사람이 노(魯)나라에 간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전조 때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서로 잇달아서 몽고(蒙古)로 투화(投化)(198)한 것은 한 국가로서는 매우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바라건대 의관은 조복(朝服) 이외에 반드시 다 중국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고, 언어는 통사(通事) 이외에 반드시 옛 습속을 변경하려 할 것이 아니며, 비록 연등(燃燈)(199)·척석(擲石)(200)이라 할지라도 역시 옛 습속을 좇아도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사대(事大)하기를 예(禮)로 써 하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예법의 상도(常道)로서, 예로부터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 국가는 실로 동방에 위치한 황복(荒服)(201)의 땅입니다. 멀리 헤쳐는 해변에 위치해 있고 또 산과 계곡의 천험(天險)의 지리(地利)를 가지고 있어서 수(隋)·당(唐)의 창성(昌盛)함으로도 오히려 신하로 삼지 못하였으며, 요(遼)나라는 인국(隣國)의 예로 대하였고, 금(金)나라는 부모의 나라로 일컬었으며, 송(宋)나라는 빈례(賓禮)로 대하였고, 원(元)나라는 혼인을 서로 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원(元)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지 수십 년 마침내 신하로 복속케 하였고 비록 생구(甥舅)(202)로 일컬었으나, 동국(東國)의 모든 일은 옛날과 아주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 고황제(高皇帝)(203)께서 즉위하시고 군병을 일으켜서 커리어 천하가 비로소 평정하여졌으니, 이 군병을 일으키지 않으면 위엄을 보일 것이 없어 행인(行人)을 구속하여 욕을 보이기도 하고, 세폐(歲幣)를 늘려 곤란을 주기도 하다가 그 뒤 무진년(204)에 이르러 황제의 위엄과 노여움이 비로소 그쳤고, 번국(蕃國)으로 봉(封)하는 일도 정하여졌던 것인데, 번국의 사제는 기내(畿內)의 사제와 다르니, 큰 나라를 섬기는 예법을 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자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조에서는 종(宗)이라 일컫고 개원(改元)(205)하였는데, 오늘에 있어서 소소한 절차를 반드시 전례에 구애받을 것은 없고 다만 그 성의를 다할 따름입니다. 이제부터는 상례의 은공(恩貢)에 표문(表文)을 붙여 치사하고 사명(使命)을 번거롭게 하지 말며, 평안한 백성을 좀 휴식케 하시면서 사대(事大)의 체통을 유지하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21) 이용희·신일철(1997); 남궁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2003)도 참조.

는 삼국통일 당시 신라의 대당정책부터, 조선 건국 초기까지 조선의 대명 정책까지 꾸준한 일관성을 가지고 유지되어 왔다고 본다. 특히, 중국이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일관된 패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 사대가 정책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피터 윤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가 패권질서라기보다는 사실상 삼국의 다극질서로 존재했던 적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돌궐, 발해, 거란, 여진, 몽골의 존재는 한반도 왕조들로 하여금 대중국 일방사대정책이 아닌, 등거리 외교 및 균형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체제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피터 윤은 한반도 왕조들의 대중국 관계가 변화하는 군사, 정치 환경 속에서의 기민한 전략이었다고 보고, 이를 이념적 복속관계로 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²²⁾

한명기는 조명의 양자관계가 16세기 말, 조선과 명, 일본과 후금의 다자관계로 바뀌고, 중국의 패권적 질서가 체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조선의 대외전략이 어떠한 격변의 와중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대관계 속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아 낼 필요와 새롭게 등장하는 후금의 도전 속에 이념적 사대를 벗어나 실용적, 현실주의적 외교의 필요성에 동시에 직면한 조선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이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해군의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당시 조선이 패권 승계 과정에서 균형과 편승 전략 사이에서 고민하던 모습을 사료를 통해 밝힘으로써 조선

22) Yun, Peter I.,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Korean States and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600~1600"(Dissertation,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98). 피터 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략적 사대가 이념적 사대로 변질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변질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종의 쿠데타 이후 명으로부터의 책봉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적 이유이고, 다른 하나는 성리학의 도입과 사대부 층의 성장으로 인한 조선의 이념 지형의 변화라는 이념적 이유다.

대의전략의 본질적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²³⁾

그 밖에도 각 왕조별로 한반도 왕조의 대외전략의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를 동아시아 전통 질서와 한반도 왕조들의 대외전략이라는 일관된 주제하에 위에서 논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한반도 왕조들의 대중원 외교의 의도와 동기, 방법과 전략체계 등이 밝혀질 때, 중국이 보는 주변국 외교전략의 본질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되고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번 호의 구성

이번 호는 19세기 개항 이전의 동아시아 전통질서와 개항 직후 시기 지역질서의 변환시기를 다루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전통질서를 보는 논문들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조합되어 있어 양 분과의 접근법의 차이와 공통점을 볼 수 있고, 향후 두 분과의 발전적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신봉수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화이(華夷)유교규범(norm)의 변화: 조선과 17세기 명·청교체기의 조공체계”는 규범을 분석하는 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17세기 명·청교체기의 조공체계를 다루고 있다. 국가 간에 존재하는 규범은 보편적으로 중요한 국제질서의 연구주제로, 국제규범론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전통질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23) 한명기,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서울: 푸른역사, 2009);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서울: 역사비평사, 2001); 한명기, 『광해군』(서울: 역사비평사, 2001) 등 참조.

라고 본다. 저자는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은 생성, 확산, 소멸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규범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과 정통성이론을 대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유교의 화이규범에 기초한 조공체계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글은 규범의 변화와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이론적 성과를 토대로 화이유교규범의 변화가 조공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명·청교체기의 조공체계를 분석하여 조선에서 나타난 화이유교규범의 변화와 그 원인을 정통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명기는 “원명교체, 명청교체와 한반도”를 통해 중일 사이에 끼여 있는 조선이 원명교체, 명청교체기에 겪었던 엄혹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 한반도의 약체성을 극복하려고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저자는 14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일어난 원명교체와 명청교체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한반도 정치 주체들의 대응양상을 살피고 있다. 여원관계의 경우, 원의 극심한 간섭 때문에 고려의 자주성은 훼손되었지만 그것은 무신정권의 종말과 무신들에 의해 실추되었던 왕권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세계제국인 원의 현실을 목도했던 고려의 지식인들은 원제국의 성세와 개방성을 긍정하고 그들을 중화로 인정했다. 한편, 세종대 이후 조선은 명에 지성으로 사대했고, 명 역시 조선의 충순을 인정하여 양국 관계에는 안정되었지만, 16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송학 위주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명을 유일한 중화로 보는 한편, 일각에서는 조선 스스로 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중화’가 되기를 지향했다. 임진왜란을 거쳐 1644년 명의 멸망을 계기로 조선은 ‘오랑캐’ 청과 일본에 의해 포위된 형국이 되어 한편으로는 청에게 순치되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을 끌어안는 정책은 엄혹한 현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미봉책으로 되는 과정이 분석되고 있다.

김봉진은 “홍대용 연행록의 대외관”에서 화이질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담헌 연행록의 대외관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당시 중앙정계의 주박(呪縛)과 이에 대한 담헌의 비판의식을 살펴보고, 담헌의 연행록에 보이는 대외관의 변화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의산문답』의 ‘화이일야’론, ‘역외춘추’론에 드러난 대외관 분석을 통해 담헌의 화이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담헌, 정조의 대외관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화이관을 세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에도(江戸) 일본의 대외관 흐름을 조선, 청국의 화이관과 비교하고 있다. 담헌의 대외관이 후대에 남긴 영향과 의미를 분석한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조선의 대외관을 보여주는 계기를 제공한다.

손승철의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상징성 검토: 공존·공유·공생을 위한 시론”은 조일관계 속에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조선통신사는, 조선 전기에는 동아시아 해역의 약탈자였던 왜구(倭寇)를 평화의 통교자로 전환시키며, 200년 간을 교린(交隣)의 시대로 이끌어 갔고, 조선 후기에는 7년간의 임진왜란 전을 마감하고, 조선 후기 260년간을 평화의 시대로 부활시킨 외교사절이었다. 조선은 명(明)을 중심으로 한 책봉체제(冊封體制)를 전제로 일본과 교린관계(交隣關係)를 맺은 후, 조선통신사의 왕래를 통해 각종 제도를 정비해가며, 한일 간에 공존의 시대를 열었고, 한반도 남부에 있는 3개의 항구도시를 열어 ‘공존의 장(場)’을 추구했다고 본다.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정권(豊臣政權)이 교린관계의 믿음을 배신한 불행한 역사도 있었지만, 통신사를 통해 다시 우호

관계를 부활시켰고, 통신사의 왕래를 통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저자는 조일관계 고찰을 통해 현재 한일 간에 나타나고 있는 독도나 역사교과서 문제를 위시한 불편한 관계를 새롭게 고찰한다. ‘공존(共存)의 역사’를 만든 통신사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공유(共有)’할 때, ‘미래에 공생(共生)’하는 역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상규는 “1884년 ‘의제 개혁’에 대한 정치적 독해”에서 개항 이후 조선의 문명 기준이 바뀌는 상황을 의제 개혁이라는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있다. 1884년 여름, 조선 정계는 의복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문명사적 전환기’의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함축적 사건이었다. 저자는 의제 개혁이 그토록 격렬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데에는 17세기 명청교체라는 문명질서의 전복이 이루어진 이후, 조선이 일상 속에서 중화문명의 정수를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으며 조선이 문명국가임을 가장 명증하게 보여주는 근간이 바로 다름 아닌 조선의 의관문물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의제 개혁의 문제는 거대한 혼돈의 시점에서 조선의 정체성과 신분질서를 뒤흔드는 문제라는 강렬한 위기감을 드러내게 하였고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의 정치세력들이 ‘문명기준의 역전’이라고 불려야 할 사태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조선 정치세력들의 끊임없는 엇박자 속에 동아시아 질서 속의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Dialogue between Two Field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on the Study of Traditional Regional Order in East Asia

Chun, Chaesu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the midst of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is faced with tasks to predict the future and cope with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s. The rise of China, and East Asia, with increasing interests in Asian civilization and traditional regional order, refreshes the academic research agenda of the nature of East Asian traditional order. Korea which has existed under traditional regional order for about two millennium, has accumulated its experience and analysis in looking at this order. Also current Koreans can learn a lot from traditional foreign policy of diverse Korean dynasties. So far the disciplin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y has studie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order, but still mor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is expected. This articles raises the need to review the research products from two disciplines and combine them to suggest a better idea for the coming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perspectives from the study of East Asian past regional order.

- Keywords

East Asia, Sino-centric order, rise of China, Ming, Ching, Chosun